

강제복송 국조·특검 카드... '문 정권' 때리기 본격화

국힘, 문 전 대통령 전방위 공세
북 눈치보기 책임 등 압박 높여
안보 이슈 보수 지지층 결집 관측

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전방위적 공격 태세에 들어가며 뒷받침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도 집중 부각했다. 권 대행은 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따듯하게 품어

야 한다'고 했던 변론 내용을 인용, 이번 탈북어민 강제복송과 대비하며 "인권변호사 문과 대통령 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직격한 것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책임 규명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탈북민을 북으로 강제송환한 문재인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야만적 행위다. 참으로 부끄럽고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거들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강제복송 탈북어민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사실 말만 있지, 입증된 건 없다"며 "저들은 몸뚱이만 돌려가서 북에서

처형당했다는데, 만약 살인자라고 누명을 쓴 것이라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라고 반문했다.
하태경 의원은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살인 혐의 관련) SI 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 있었다고 치면 더더욱 이 사람들의 귀순 진정성이 100%라는 것이다. 북한에 돌려 보내지면 구타에 고문에 그냥 총살에 요즘은 불까지, 시신 조각까지 하는데"라면서 "우리 법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건은 당시 문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며 "(귀순의사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여론의 대대적인 '전투 모드' 전환 태세를 두고 당 내홍, 경제위기 등과 맞물린 여론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책임 공세로 화제를 분산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안보 이슈화를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라는 관측인 셈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찰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며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반인도적·반



의장실 나서는 여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의장주재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원 구성 쟁점 사개특위 잠정합의

5대 5 동수에 위원장은 야당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개특위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나,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에서부터 팽팽히 맞서면

서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양측이 각자의 최종안을 토대로 '절충안'을 마련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민주 '8·28 전대' 주자 간 역학구도 복잡다단

이재명 17일 출마, 정치개혁 방점
비명계, 사법리스크 앞세워 견제

14일 이재명계 핵심 인사에 따르면 이 고문은 사흘 뒤인 17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7일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고문이 평소 중요하다고 밝혀 온 내용을 선언문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을 후보 등록일(17~18일)까지 늦춘 것은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출사표의 주된 메시지도 '당내 통합'과 이를 통한 '정치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고문의 출마를 예상했던 비이재명계로서는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기 위한 반전 카드를 찾는 데 연일 집중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비이재명계에서는 전날부터 이 고문

의 '사법 리스크'가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판을 흔들 만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에서 여권의 프레임이기도 한 '방탄용 출마'마저 언급한 것이다.
이를 두고 '명낙대전'으로 흘렀던 지난 대선 경선 때의 데자뷰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대선 후보직을 놓고 이 고문과 경쟁하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향후 이 고문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구속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비이재명계인 조웅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고문의 출마를 두고 "배 위에 구멍은 그대로 났는데 일등석 주인만 바뀌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8·28 전당대회를 둘러싼 계파 간 권력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도 '이재명계 대 비이재명계' 대리전으로 흐르며 계파 간 신경전은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항마'로 나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4인방과 중진 김민석 의원의 예비경선(컷오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당권 주자들 간 역학 구도도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윤 대통령 "금리인상, 약자에 전가돼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불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 가파른 이자부담 증가로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만기 연장·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부담에 대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이자 감면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